

# 국립종자원, 식량 종자 생산 공급제도 개선

## 2025년까지 벼·밀·콩 등 주요 식량종자 공급률 60% ↑·비축 5% 추진... 기후변화·식량안보 적극 대응 방침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오는 2025년까지 벼·밀·콩 등 주요 식량 종자에 대한 정부 보급종 공급률을 60%로 높이고, 종자 공급량의 5% 물량에 대해 비축을 추진하는 등 식량 종자 생산 공급제도 개선으로 식량안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와 병충해 발생 증가 등으로 국가 식량안보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는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고품질 유장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식량 종자 공급률도 감소 추세여서 국립종자원은 식량 종자 생산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계기로 기

후변화와 식량주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전망이다.

첫째로 식량 종자 생산 측면에서는 생산단계별 종자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고품질 종자로 주력품종을 교체하며 식량 종자 생산 농가(채종농가)에 대한 생산지원금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식량 종자 원종종과 원종 생산단계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포장검사와 종자 검사를 시행해 품종의 순도와 생육상황 등을 정밀 관리하고, 보급종 단계에서는 관리부실 생산 포장(채종포장)은 2차 인위 재료를 도입(1차 경고) → 3차 농가 배제 → 3차 단지 배제)한다.

둘째, 식량 종자 공급측면에서는 주요 식량 종자 비축을 확대하고, 가루쌀 종자 생산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며

종자 신청 공급시스템도 개선한다.

점차 증가하는 기상재해와 병충해 발생 증가에 대응해 벼·콩 등 주요 식량 종자에 대한 비축을 확대해 식량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한다. 현재 연간 공급량의 1% 수준인 종자 비축량을 '25년 5%, '30년 10%로 확대해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지원한다.

올해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된 벼 종자에 대해서는 실제 보급종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분석을 통한 평가를 시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셋째, 재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량 종자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국립종자원의 총괄 조정 기능과 역할도 확대한다.

종자 정선센터 9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 점검 조치하고 노후시설 및 장비 교체와 첨단 장비 도입으로 재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립종자원은 이러한 식량 종자 생산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현재 50% 수준인 보급종 농가 공급률을 '25년 60%, '30년 65%까지 상향시켜 식량자급률 향상과 균정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방문진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식량안보와 기후변화의 위기를 국립종자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 종자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시행 4개월 만에 3만명 돌파... 재가입자는 월 최대 4만 5000원 혜택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에 따르면 지난 7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신청자가 30,000명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 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다스체가해본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써 7월부터 시행 하고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의 상태인 경우에는 지급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운 분 아나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종고에 부당하게 되는 데, 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9.5%(11,888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

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경남'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5,000원을 지원하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5.6%(28,688명)로 가장 많았다.

공단은 '저임금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저소득층 노후 소득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민연금 1355, 유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도, 연말 대비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 실시

## 내달 23일까지 도내 도축장 18개·집요장 개소 대상, HACCP점검 결과 미흡사항 보완이행 여부 확인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연말을 맞아 축산물의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오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주 동안 도내 도축장 18개소, 집요장 7개소를 대상으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운영 및 위생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올해 상반기 합동 평가

반(지자체, 소비자단체, 대학교수) 지적사항의 보완 조치 이행여부, 작업장 위생관리, 영업장 준수사항 등이 다.

상반기 지적사항은 자체 위생관리 미흡(도축장의 시설, 위생관리, 교육 훈련)과 HACCP 운영 미흡(위해분석제 실시, 한계기준 변경의 적절성, 개선조치 기록관리, 기계기구의 검증), 위생관리 등이었다.

이에 상반기 도축장 집요장을 대상

으로 HACCP 지도교육 및 현장 기술 지도 등 사전점검을 통해 합동점검에 대비했고, 그 결과 25개소 모두 적합(보완)으로 판정됐다.

또 12월 중으로 동절기 축산물 유통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업체(양념육 등) 15개소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여부, 온도 조작 행위 여부, 유통

기한 위반조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개선하고, 주요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고의적 위반행위나 중북위반행위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은 "이번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통해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 및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대한건축 전북건축사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박진만)가 전북도에 1,000만원을 기탁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낼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야 박진만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유병설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진만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은 "추운 날씨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도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해 이웃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건축 전문단체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지속적으로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원들과 박진만 회장님께 감사 드린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지역사회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해 도민이 함께 잘사는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 마련

##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주관, 19일 도청서 기념식·세미나·아동권리 체험전 개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날(11.19.)을 맞아 기념식, 세미나와 아동권리 체험전을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오는 18일~19일 전북도청에서 개최한다.

2022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는 18일 오후 2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아동학대담당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가운데 열린다.

이날 기념식은 1부와 2부로 진행

된다. 1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후원금 기탁식 및 아동학대예방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정동민 사무관의 실무 사례중심강연이 열린다.

19일에는 아동권리체험전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페스티벌(아가페)' 행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청 다목적광장(도청어린이집 옆)에서 진행되며, 아동과 가족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4개의 테마(발달권, 참여권, 생존권, 보호권)로 구성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공예체험 등의 놀이부스 △아동발달검사 △아동범죄예방 △플라마켓 등이 있다.

이밖에도 올해에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라북도경찰청의 협조로 경찰체험 프로그램인 '영양가는 청소경찰학교 부스'를 운영한다. 아동학대예방상담, 지문사전등록, 경

찰제목 및 장비 체험 등을 통해 도민들의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과 인식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의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동 등 많은 도민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도, 수능 이후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022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긴장감 해소를 위해 17일부터 진로·심리 상담과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부담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과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김경수 기자

도내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에서도 음악콘서트, 영화상영, 도자기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www.youth.gokr) 종합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경수 기자

부안군 광고 제2022-1669호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출발번호 510-1번지 인원이 제외되어 도로변 개발행위 용도 및 설정을 추진함에 있어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2호 및 관내의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50세 이상 국민연금 제6호 및 관내의 시행령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된 지역을 지칭하며, 국도 노선상 노후 노선이 통과하고 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현황
  - 위 치: 부안군 북동면 우곡리 5-6, 번지 인원
  - 면적: 46㎡
  - 면적: 457,612㎡
  - 유도지역: 자연농촌지역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현황
  - 공로판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도로변 개발행위 용도 및 설정을 추진함에 있어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2호 및 관내의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50세 이상 국민연금 제6호 및 관내의 시행령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된 지역을 지칭하며, 국도 노선상 노후 노선이 통과하고 있다.
  - 이 기간 동안에 추진 중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510-1번지 인원의 출발번호 510-1번지 지정은 도로변 개발행위 용도 및 설정을 추진함에 있어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2호 및 관내의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50세 이상 국민연금 제6호 및 관내의 시행령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된 지역을 지칭하며, 국도 노선상 노후 노선이 통과하고 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현황
  -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2호 및 관내의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50세 이상 국민연금 제6호 및 관내의 시행령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된 지역을 지칭하며, 국도 노선상 노후 노선이 통과하고 있다.
  - 관내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50세 이상 국민연금 제6호 및 관내의 시행령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된 지역을 지칭하며, 국도 노선상 노후 노선이 통과하고 있다.
  -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2호 및 관내의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50세 이상 국민연금 제6호 및 관내의 시행령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된 지역을 지칭하며, 국도 노선상 노후 노선이 통과하고 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2호 및 관내의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50세 이상 국민연금 제6호 및 관내의 시행령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된 지역을 지칭하며, 국도 노선상 노후 노선이 통과하고 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2호 및 관내의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50세 이상 국민연금 제6호 및 관내의 시행령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된 지역을 지칭하며, 국도 노선상 노후 노선이 통과하고 있다.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지정일자	제정일자	소재지	주소	비고
1	충주면 우곡리	364-1	대	2,362	394	자연농촌지역	충주면 우곡리 366-1	
2	충주면 우곡리	514-1	전	60	60	자연농촌	충주면 우곡리 721	
3	충주면 우곡리	514-2	전	342	342	자연농촌	사물 정자마을 90-1	
4	충주면 우곡리	514-11	과	18	18	부안군		
5	충주면 우곡리	514-12	전	48	48	부안군		
6	충주면 우곡리	514-15	과	49	49	부안군	충주면 좌산리 436	
7	충주면 우곡리	515	달	1,139	676	부안군		

나. 세부현황표지조사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지정일자	제정일자	소재지	주소	비고
1	충주면 우곡리	364-1	대	2,362	394	자연농촌지역	충주면 우곡리 366-1	
2	충주면 우곡리	514-1	전	60	60	자연농촌	충주면 우곡리 721	
3	충주면 우곡리	514-2	전	342	342	자연농촌	사물 정자마을 90-1	
4	충주면 우곡리	514-11	과	18	18	부안군		
5	충주면 우곡리	514-12	전	48	48	부안군		
6	충주면 우곡리	514-15	과	49	49	부안군	충주면 좌산리 436	
7	충주면 우곡리	515	달	1,139	676	부안군		